

불안정노동의 현황과 대응 방향

: 비정규노동과 플랫폼노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김직수

고용증가 둔화와 일자리의 질 저하

- ▶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율의 변화가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임
- ▶ 문제는 2016년 이후로 고용증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
- ▶ 최근 수년 간 경제성장률 또한 3%이하로, 부정적 전망 계속됨
- ▶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또 그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소비진작 및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가겠다는 정책이 주춤하면서 경기부양을 통해 고용을 늘리는 기존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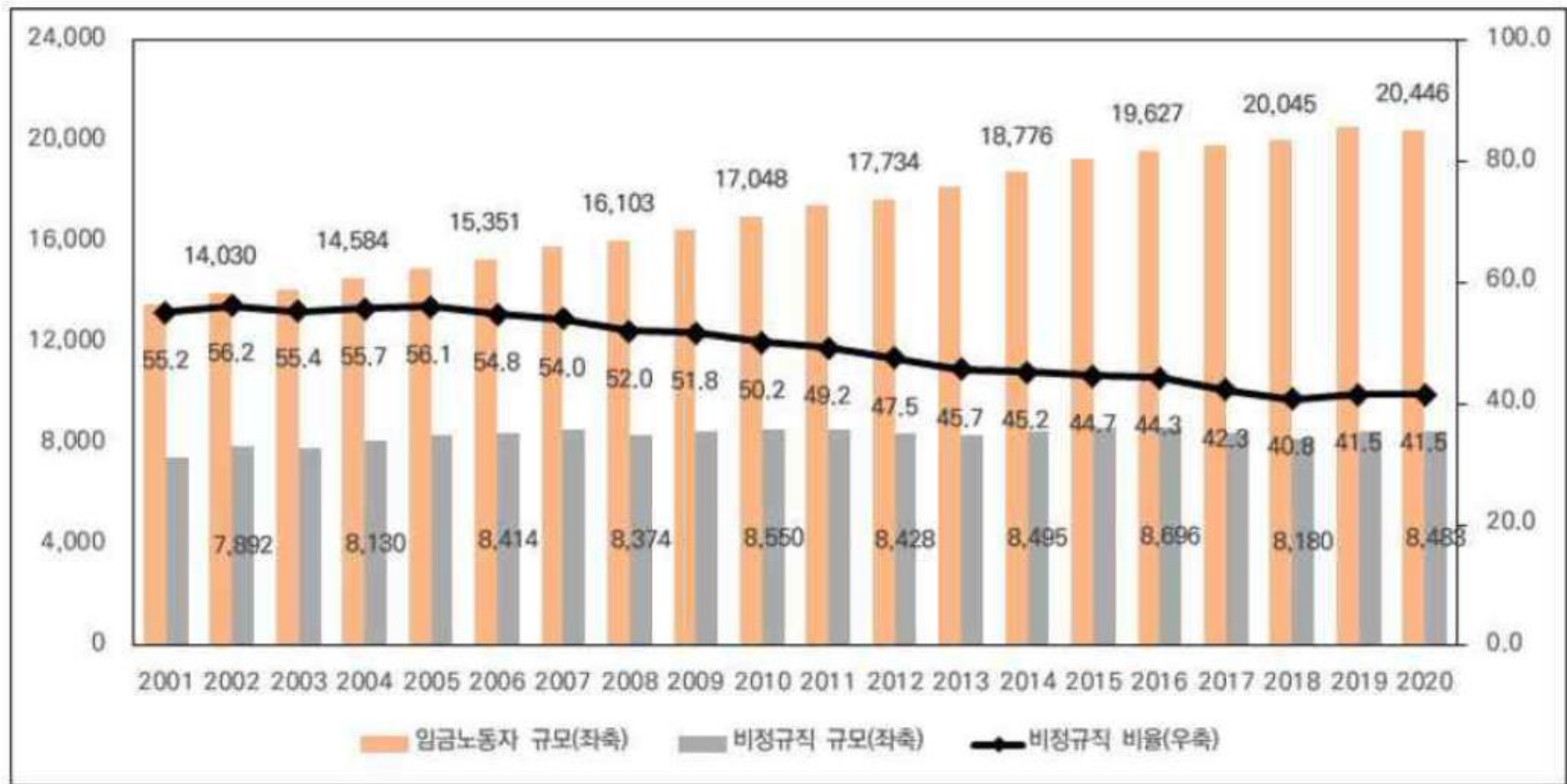
<표 3-1>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율, 정규직 및 비정규직
증가율 추이 (단위: %)

구분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율	정규직 증가율	비정규직 증가율
2002	7.4	3.6	1.2	5.6
2003	2.9	0.8	2.9	-0.7
2004	4.9	3.1	2.2	3.8
2005	3.9	2.6	1.8	3.2
2006	5.2	2.6	5.5	0.2
2007	5.5	3.5	5.3	1.9
2008	2.8	1.4	5.8	-2.4
2009	0.7	2.3	2.8	1.9
2010	6.5	3.5	7.0	0.2
2011	3.7	2.7	4.6	0.8
2012	2.3	1.3	4.7	-2.2
2013	2.9	2.9	6.5	-1.2
2014	3.3	2.9	3.7	2.0
2015	2.8	2.9	3.9	1.5
2016	2.9	1.6	2.3	0.8
2017	3.1	1.3	4.9	-3.3
2018	2.9	0.4	3.4	-2.8
2019	2.2	1.1	1.3	4.2
2020	0.9	-0.8	-0.5	0.6

줄어들지 않은 비정규직 규모

- ▶ 정권 초기 비정규직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 역시 이전 정권들과 다르지 않음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시작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던 정권으로서는 부끄러운 현실

[그림 3-1]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추이 (단위: 천명, %)



비정규노동 구성변화

- ▶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비정규직 내에서도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일반임시직 노동자들이 줄어드는 한편, 기간제 노동자와 임시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증가
- ▶ 임시 · 일용직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2>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규모 변화 (단위: 천명, %)

구분	고용형태	2016.8 (A)	2020.8 (B)	차이 (C=B-A)	증감률 (100*C/A)
임금노동자 전체		19,627	20,446	819	4.2
정규직 여부	정규직	10,931	11,963	1,032	9.4
	비정규직	8,696	8,483	-213	-2.4
비정규직 고용형태	일반임시직	2,509	1,237	-1,272	-50.7
	기간제	2,046	2,635	589	28.8
	상용파트	138	315	177	128.3
	임시파트	1,783	2,224	441	24.7
	호출노동	788	812	24	3.0
	파견노동	201	164	-37	-18.4
	용역노동	696	552	-144	-20.7
	특수고용	536	545	9	1.7

비정규직 문제의 새로운 양상

- ▶ 임시직 감소의 세 가지 원인: 경기변동 효과, 구조조정 효과, 제도화 효과
- ▶ 기간제 증가는 통계 집계 방식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문제임
- ▶ 시간제 증가는 초단시간 증가가 두드러져 우려스러움
- ▶ 결국 비정규직 가운데 임시직의 감소와 기간제 및 시간제의 증가는 비공식적 성격의 공식화라는 측면을 띠기는 하지만 취약성의 개선으로 보기는 어려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도입하고 간접고용 사용자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이전 정권에 비해 상당한 진전
- ▶ 조직노동의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 경제정책과의 정합성 등도 주목받았음
- ▶ 그러나 ...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접 고용형태라는 초심에서 무기계약직 형태, 민간위탁 유지, 자회사를 통한 방식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
- ▶ 결국 ... 정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보기 어려움

정부 정책의 문제점

-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의 추진이 자취를 감춘 점은 가장 큰 문제
- ▶ 고용공시제, 차별시정제도 등 부분적 개선에 그치는 한계
- ▶ 정리해고 남용 방지제도 역시 도입에 진전 없음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경우 자회사의 직접고용 인력이 ‘정규직’으로 규정된 점이 가장 큰 한계
- ▶ 자회사 형태의 고용 전환은 민간부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SK브로드밴드, 포스코 등의 예)
- ▶ 처우개선 미흡, 일방적인 ‘표준임금체계’ 추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포기 등 공공부문의 ‘나쁜 일자리’를 일소하겠다는 원래의 정책목표로부터 어긋남

초단시간노동 증가 대책 필요

- ▶ 초단시간 노동자 중 다수가 비자발적이며 이로 인해 저임금으로 인한 소득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음
- ▶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대부분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아니기에 차별을 겪는다는 점도 해결되어야 함
- ▶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들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에는 부족
- ▶ 무엇보다 ‘노동시간 쪼개기’ 관행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이 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정책의 틀 내에서 추진되어야 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온전한 형태로 재추진하는 것부터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모든 부문에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합리적 수준으로 줄이자는 전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음.
-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제대로 완결짓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회사 모델의 재검토, 공무원(무기계약직) 처우개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함

그 다음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도입

-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더불어 고용형태공시제 보완 및 강화, 법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시정, 정규직 전환시 재정 및 세제 지원, 비정규직 채용 시 부담금 부과, 원하청 격차 해소, 초기업단위 교섭 지원 등 필요
- ▶ 중소기업사업장에 비정규직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초단시간 노동자 대책도 절실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 ▶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장밋빛 미래만 강조하였고, 승자독식 경제의 문제점 등에 대한 대비 하지 않음
- ▶ 무엇보다 혁신 저해 우려를 들며 플랫폼 경제의 진정한 성장동력인 '노동 덤핑'을 막지 못함
- ▶ 결국 플랫폼 노동이 부상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이 심화됨

플랫폼경제 관련 정부 대응 현황

-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혁신성장'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특히 규제개혁이 강력히 추진됨
- ▶ 정부는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셈
- ▶ 한편에서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한국이 '후발주자'임을 강조하면서 전폭적인 규제환경 개선(탈규제)과 재정투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동정책이 후퇴하면서 기본적인 신뢰마저 상실함

<표 3-3> 플랫폼 노동자 범위

구 분	종사상 지위	유형		주요 직무
플랫폼 이용	임금노동	노동 플랫폼	지역기반형 플랫폼경제 종사자	대리운전, 배달, 심부름, 의료요양 등
	웹 기반형 플랫폼경제 종사자		통번역, IT, 디자인 등	
	비임금노동 (자영업 등)	판매플랫폼		ebay
		자산임대플랫폼		Airbnb
		전통적 자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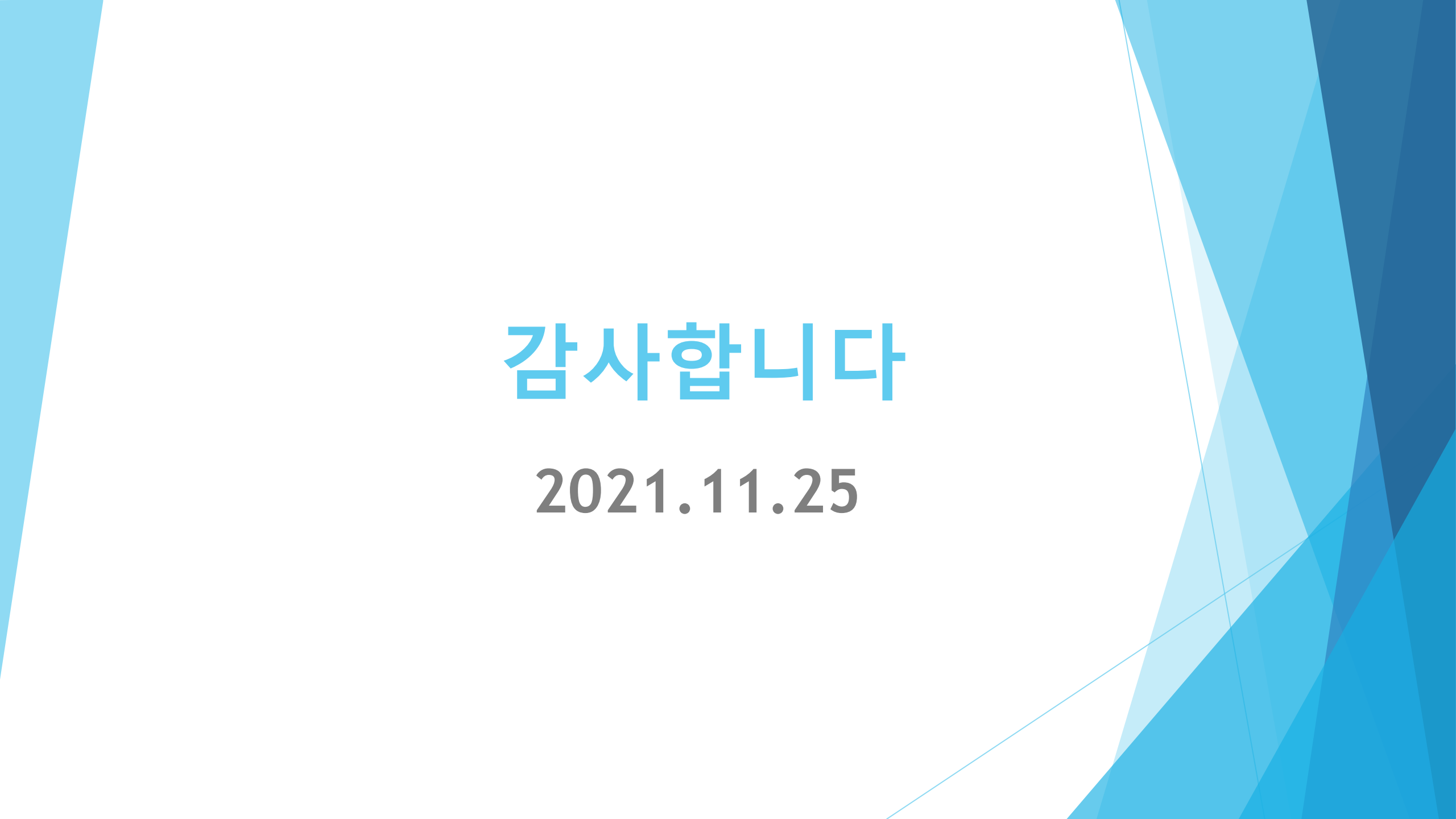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8)

플랫폼노동 대응방향

- ▶ 노무제공자 개념 도입을 통해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또 동시에 노무제공자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다수의 불안정노동자들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향
- ▶ 다만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다양한 형태의 사업주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
- ▶ 우선 플랫폼경제의 문제점인 독점에 대한 규제 선행되어야 함
- ▶ 이와 더불어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
- ▶ 이들을 노동관계법의 틀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함.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재검토 필요

플랫폼노동 유형별 대응방향

- ▶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 노동(클라우드 워크)의 경우 좀 더 면밀한 조사연구가 필요. 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특정 플랫폼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전속성을 인정하고 부분적으로나마 노동자성 인정 필요.
- ▶ 지역기반 플랫폼, 특히 이동노동에는 안전운임제 확대적용 필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선행되어야 함.
- ▶ 특히 배달과 같이 건수노동 성격이 더 강한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교통법규 위반사항 등 발생시 플랫폼 측에 벌점 부과하고 누적시 운영 정지 등 제제 가하는 방식 고려할 필요. 노동시간 규제(인터벌 규제) 역시 실질적인 휴식시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필요.

The background features abstract, overlapping geometric shapes in various shades of blue, ranging from light sky blue to deep navy blue. These shapes are primarily located on the left and right sides of the frame, creating a modern, dynamic feel. The central area is a plain, light grayish-white, providing a clean backdrop for the text.

감사합니다

2021.11.25